

[종합·해설]

영산강 살리기 세부사업 어떻게 달라졌다

준설 1천만m³ 늘리고 홍수조절지 2곳 설치

농업용 저수지 제방 높임 9곳서 14곳으로

하구둑~담양댐 220km 자전거도로 설치

정부가 8일 확정 발표한 영산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총 2조6천461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최초 사업계획 예산 1조5천530억원보다 1조900억원이 증가했다.

◇ 최종 확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 애초 65.9km에 2천만m³을 준설하기 했던 하도 정비사업이 111.6km에 3천만m³로 증가했고, 자전거 도로의 경우도 212km에서 220km로 늘었다.

나주 노안에 설치기로 했던 자연형 보 1개소도 광주시와 나주시 경계의 승촌보와 함평군, 무안군 경계의 죽산보 등 2곳에 설치기로 했다.

담양에 들어설 홍수조절지도 화순까지 포함해 2곳으로 늘었고, 농업용 저수지 9개소에 대한 제방 높임도 14개소로 확대됐다.

반면, 영산강 120.3km에 달하는 환경정비사업이 10개소 73km의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축소됐다. 제방보강도 101.7km에서 17km로 줄었다.

특히 영산강 하구둑의 통선 갑문을 넓혀 바다와 영산강 사이를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남도의 요구안도 '운하'를 의식한 탓인 지 반영되지 않았다.

◇ 물부족 대비 수자원 확보 = 이날 최종 확정된 영산강 마스터플랜은 하도 준설과 2개의 보(洑) 설치로 한강의 70% 수준인 0.4억m³ 규모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영산강의 준설량은 총 0.3억m³로 평균 준설 깊이는 0.6m이며, 보가 설치되면 영산강 전체 구간의 저류량이 현재 2억2천300만m³에서 2억6천100만m³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14개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증고높이를 4.7m로 높여 현재 2.9억m³인 저수량을 늘려 3.6억m³를 확보하게 된다.◇ 수해예방을 위한 홍수방어대책 = 영산강 하구둑부터 담양댐까지 111.6km 구간에서 3천만m³를 준설해 홍수위를 낮춰 득 누수와 하천 범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한다.

구연 1곳 등이다. 이곳은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 부하량 산감계획을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 조기 투자하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 수준인 2급수를 달성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15개와 마을하수도 127곳, 가족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증설 3곳, 하수관거 확대 22곳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 한다. 또 하천 내 농경지를 정리해 농약과 비료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고 3km에 이르는 생태하천 1곳도 조성한다.

◇ 영산강을 '로맨틱 리버'로 = 하구둑에서 담양댐에 이르는 220km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등 방치됐던 수변공간을 활용해 여가공간을 조성한다. 4대 강 살리기와 병행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천연 치수와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해 정비하고 유람선과 역사문화생태 탐방 등 강변관광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목포에서 광주에 이르는 80km 구간에 뱃길이 복원되고 영산강 주변의 개발여건이 유리한 마

을에 농어촌 개발사업을 종합지원하는 미래의 금수강준 모델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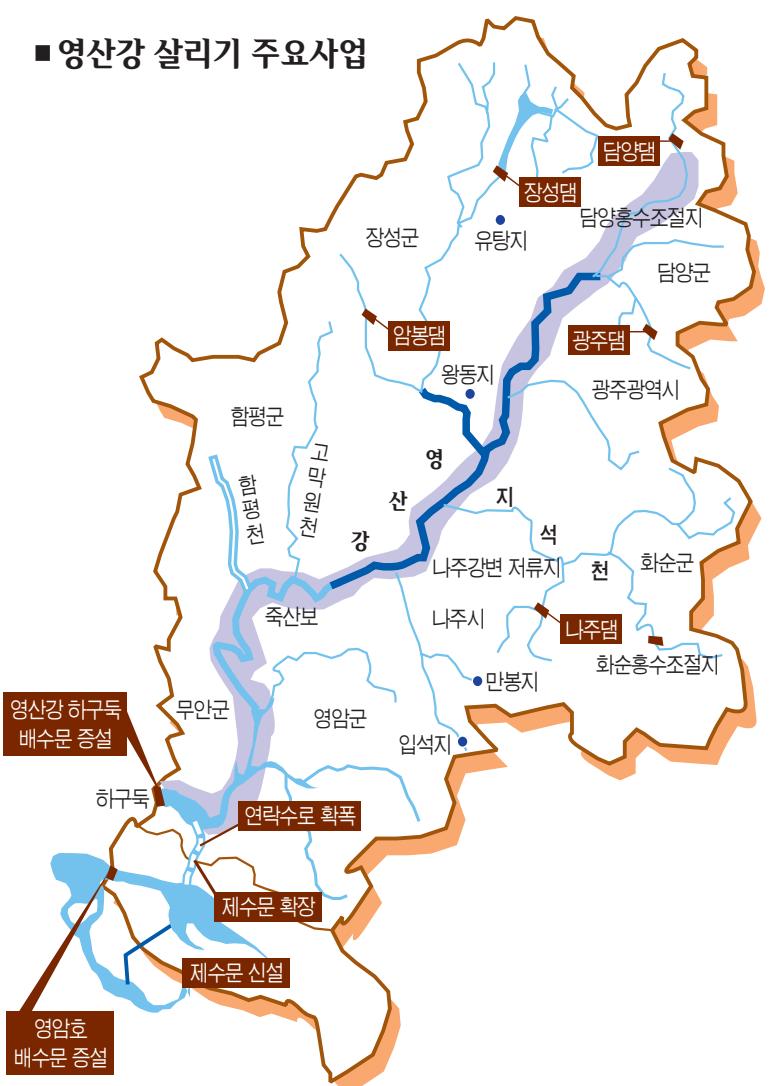
◇ 섬진강 살리기도 함께 추진 = 비교적 수질 환경이 잘 보존된 섬진강사업도 영산강 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용수 확보와 갈수기 하천유지 유량을 공급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 9곳에서 증고 사업을 벌여 0.2억m³인 저수량을 0.3억m³로 늘리는 등 홍수조절 용량을 1천만m³로 확대한다.

낡고 오래된 득 20km도 보강하는 한편 생태습지 3곳 2.5km와 섬진강 생태하천 31km를 조성하고 섬진강 하구에서 섬진강댐이 있는 212km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 정부는 영산강을 포함한 4대 강 분류의 준설, 보 설치, 하천정비 등 대부분의 강 살리기 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본 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은 이달부터 발주준비에 들어가 하반기에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발주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영산강 살리기 주요사업



盧 前 대통령 수사 내용 어디까지 담나

검찰 '朴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 앞두고 고심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대검 중수부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부는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일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노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수사 내용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해 발표문 완성이 지연되고 있다.

통상 공소시강가가 지났거나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때는 구체적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의율(擬律·관련법 적용) 내용과 처리 결과 정도만 발표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640만달러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고, 전직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 경위와 진행 과정 등을 발표문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급속히 확산된 '검찰 책임론'에서 파생되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수사의

정당성을 해명해야 한다는 겸찰 내부의 여론도 작용한 것도 풀이된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어느 선까지 밝힐지에 달려야 할지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 전 회장이 전달했다는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 외에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송금한 40만 달러 등 노 전 대통령을 향했던 의혹이 여럿인 데다 자칫 상세히 혐의 내용을 밝힐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 겸찰 입장에선 여전히 부담스럽다.

검찰이 이처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결과문에 노 전 대통령 부분을 포함기로 한 겸찰의 입장에 대한 법조계의 여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던 사건인 만큼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수사의 당위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마당에 겸찰이 다시 고인의 혐의를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대졸 미취업자 지원 473억원 투입 인턴조교 채용·취업 교육훈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졸업자들을 돋기 위해 총 473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대학 내 인턴조교 채용 사업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8일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 둔치 '영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에서 중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들로부터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접수해 다음달 중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자체 공고를 통해 인턴조교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미취업 대졸자를 모집하게 된다.

사업 내용 및 신청 요강 등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r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한마음축제

100

한마음축제

제작: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제작: 광